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에 김규태 의원 유력

공석인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에 새누리당 초선의 김규태(동해·사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새누리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당내에서 논의한 결과 경건위 소속 초선의원이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소속 경건위 의원들의 회의결과 김규태 의원으로 단



일후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김 의원을 후보로 선출한 만큼 사실상 내정수순이라는 설명이다. 경건위원장 선거는 16일 본회의에서 의원투표로 결정된다. 이성현기자

지역업체 공사 참여·자재사용 늘었다

【동해】동해시가 침체된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 지역제한 적용을 받는 대형공사 추진 시 분할 발주로 지역 건설산업체 참여 확대, 지역생산제품·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동해지역 조례 제정 이후 60.3%까지 증가

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의 지역 건설공사 고용과 함께 지역 건설기계를 사용토록 권장 중이다.

또 3억원 이상 종합공사 시 지역 건설업 및 관련 공사업체 하도급 우선 참여, 공사 자재·장비·인력에 대한 지역업체 구입 사용 확대, 지역업체 참여 등의 비율이 50% 이상 등 자율적 설정 준수,

하도급 및 지역업체 대금 현금 지급 등의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동협약제 대상사업 16건 413억6,600만원 가운데 동해지역 업체 참여는 14건 164억7,700만원(39.8%), 5억원 이상 발주공사 58억5,900만원 중 지역업체 8개 업체 20억2,000만원(34.5%)의 실적을 올렸다.

자재·장비·인력 사용은 32억3,900만원 중 19억5,400만원(60.3%)으로 지역자재와 장비 및 인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선우대용 시 건설과장은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계약부서 및 발주부서와 함께 관급공사 발주 시 하도급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분할발주 등의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참기자 chang@kwnews.co.kr

“2천억 공사에 지역 몫 고작 45억”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기공사〉

업계 “준정부기관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해야”

철도시설공단 “관련 규정에 빠져있어 적용 불가능”

도내에서 추진되는 공공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제한돼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기공사 17건 2,284억원 규모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 중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245억원 미만 공사는 15건 1,749억6,100만원이다.

국가계약법상 30% 이상 도내업체가 참여할 경우 최소 524억8,830만원을 수주할 수 있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245억원 미만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 1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

공단은 현재 중앙행정기관 발주공사에만 시행되는 추정가격 7억원 이상 82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도내 전기공사업계는 정부 예산으로

위탁 집행을 하는 준정부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국가계약법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의 내부 지침으로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기회가 축소되고 있다”며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올해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기공사 2,200억원 중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본은 45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에 대해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에 현재 공단은 빠져 있기 때문에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공단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

원주~강릉 복선철 전기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축소 논란

전기공사협 도회
“기재부 지침 불구
17건 중 11건 제외”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동도급 해당 안돼”

강원도내 전기공사업체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예정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력분야 공사와 관련,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축소·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전기공사협회 도회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달부터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전력분야 공사를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인 가운데 공단측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추정가격을 기획재정부 고시와 달리 자체 지침만으로 축소 운영,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기회가 봉쇄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고시에는 준정부기관의 경우 추정가격 245

억원 미만이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로 발주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단측은 준정부기관 또는 공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82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단측이 발주하는 도내지역 17건의 전력분야 공사 중 11건은 추정가격 82억원을 초과해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배승철 전기공사협회 도회 사무국장은 “기재부로부터 철도시

설공단을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대상금액을 현행 82억원에서 245억원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4조 1항을 보면 철도시설공단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변경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서울지역 조경업체 무더기 영업정지 위기

서울지역 조경업체들이 무더기로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조경업체들이 보유한 수목에 대한 자본금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업체들이 하루아침에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전락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조경공사업체의 등록기준 가운데 공사용 수목에 한해서만 자본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경업체들은 조경포지에 수목을 심어 놓고 이를 조경공사에 투입하거나 판매한다. 이 가운데 공사용 수목은 조경공사업체의 자본금으로 인정하지만, 판매용 수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공사용과 판매용 수목의 명확

市, 자본금 인정기준 강화 등록기준 미달업체 늘어 건협, 국토부에 해석 요청

한 구별은 물론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남은 수목을 공사용으로 불지, 판매용으로 불지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부실업체 퇴출 차원에서 조경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후 서울시가 공사에 투입하고 남은 수목은 자본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공사에 투입하고 남은 수목을 인정해줄 수 없다고 판

단하면서 업계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며 "수목으로 자본금을 인정받으려면 업체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보유 수목을 제외하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경업체들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는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것 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업계는 이 같은 해석과 조치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없는 일이라며 서울시가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경업계로서는 이번에 영업정지를 피한다고 해도 향후 자본금 기준을 맞추려면 재정이 늘어나는 부담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에 다음달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

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상업체가 몇 개나 될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4월 행정처분 대상 업체가 150여개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조경은 몇 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설협회가 이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서울시가 이미 내린 해석을 뒤집으려면 국토부의 별도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서울시처럼 해석한 사례가 없다"며 "국토부 해석을 받아 서울시에 통보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건설공사 계약문서 인지세 논란 '2라운드'

건설공사 계약문서에 대한 인지세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변경계약 등에 대한 인지세는 논란이 정리됐지만, 전자인지 재사용에 대한 원·하도급 간 연대책임 조항이 불씨로 남아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 전자계약에 대한 인지세 납부 확대 시행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증액 인지세 납부 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다.

계약문서에는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그런데 건설공사에 전자문서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해 수입인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제가 됐다.

이에 세무당국은 국가와 지자체 등과

변경계약 문제는 증액분만큼만 추가 납부로 가닥 업계, '전자인지 재사용' 연대책임 놓고 갈등 증폭

의 전자계약문서에만 먼저 전자인지를 시행하고, 올해부터는 민간공사와 원·하도급 계약 등으로 대상을 확대 시행했다. 그런데 건설공사 특성상 변경계약 등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또다시 인지세를 내야 하는지 논란이 됐다.

올해 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확대되자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세무당국은 증액분 만큼만 인지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정리했다. 또한 업계의 편의를 위해 국

세청 홈택스로만 낼 수 있었던 것을 금융결제원에서 발행한 전자인지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문제는 금융결제원 전자인지는 이를 스캔해서 전자문서에 붙이는 형식인데, 재사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거다가 원·하도급 계약 시 재사용에 대한 처벌은 재사용한 주체만이 아니라 원·하도급 모두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전자인지를 재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전자인지에 계약번호를 집어넣어 재사용을 방지하거나 원·하도급 한쪽이 모두 납부하고 당사자끼리 정산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선의의 피해를 막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원·하도급 간 깊은 불신 사태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일부에서 연대책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인지세 금액이 많지 않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미리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